

급변하는 세계경제속의 한국낙농의 현실과 발전과제(Ⅱ)

장 일 광

한국낙농육우협회 이사
서울우유협동조합 감사

2) 정책당국의 역할

한 산업을 국가가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 산업에 종사할 적절한 인력이 유지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이며 그 수단으로는 적절한 소득 보장을 제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.

또한 낙농 선진국들이 지난 40여년간 투자해 온 엄청난 규모의 재원(미국의 경우 매년 25억불 상당, EC의 경우 매년 20-30억불 수준)을 앞으로 6 년 남짓 사이에 시행해야 하나 낙농은 그 생산 기

반의 조정과 개편이 단시일에 될 수 없기 때문에 적어도 15년이상 지속적인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다음과 같은 정부의 낙농정책 추진 역할을 제시한다. 정부가 할 낙농관련 정책 내용은 크게 ① 낙농 서비스 부문 ② 낙농구조 조정 ③ 낙농 안정화 계획 ④ 간접소득지지 ⑤ 간접 무역대책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구체적 내용은 (별표 6)과 같다.

(표6) 정부의 낙농정책(안) 제시

구 분	목 적	정 책 (안)
1. 낙농서비스부문		
○ 연구, 개발, 보급	○ 사회후생적 차원에서 공공 자원에 의한 연구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함	○ 낙농 및 유가공기술연구소 설립 운영 -젓소개량 : ET, SEXING, 혈액형 검정 -가축질병 및 임상연구 -유가공 기초기술 연구
○ 기술 및 위생기준	○ 위생 및 안정성 제고	○ 젓소 전염성 질병 예방을 위한 조사, 검사, 방역(혈청 검사, 질병예찰)
○ 낙농관측	○ 장단기 관측, 예보로 생산기반 확보	○ 사료작물 검사, 토양검사
○ 등급제, 검사 공영화 유통개선	○ 소비자 보호, 유통효율 개선	○ 낙농정보, 통계체계 정비 및 확립 -종합 낙농 전산 시스템
○ 세제 개선	○ 생산비 절감, 생산의욕 고취	○ 집유일원화 -유질에 의한 유대 등급제 실시 -원유검사 공영화 -원유 유통체계 개선 -유제품 유통체계 개선
		○ 사료 및 낙농기자재 관세, 부가세 면제 ○ 사료 종자 관세 면제 ○ 전업규모 낙농가 면세 : 35두(착유우 21두)

- 긴급재해 보험
- 예측치 못한 손실 보전
- 자연 재해 위험 감소
- 경영개선
- 생산성 향상
- 공공 서비스 지원
- 생산비 인하 효과
- 2. 낙농구조 조정
- 낙농개발
- 낙농의 경제 사회적 지위 확보
- 지원시설 구조정비
- 자본 투입
- 환경 보전계획
- 낙농 기초자원 보호
- 낙농용자 계획 (용자 지원)
- 장기저리 용자로 생산 기반 확보
- 낙농시설 시설용지 확보
- 용지난 해소
- 홍수피해
- 농민(낙농가)보험료 지불 제도
- 작물(사료작물) 보험
- 가칭 낙농 경영개선 프로그램 (예 : 미국의 DHI 프로그램)
- 농업용 전기료 인하 : 현행의 10%
- 낙농 전업화 추진 지원
 - 규모 : 착유우 21두 (총35두)
 - 부부 노동 경영
 - 전업규모에 대한 면세화
- 낙농단지 조성
 - 국유림 및 유휴농지의 효율적 활용 조치
 - 초지조성
 - 도로, 교통, 수도, 전기, 통신 등 사회 간접시설 투자
 - 교육, 문화, 상권 등 생활여건 조성
 - 이전비 보조, 면세혜택
- 휴경지 및 한계답 이용에 대한 법적조치
- 초지조성
- 관개, 전화(電化), 수송
- 항만의 사료 전용 화물 터미널 건설
- 낙농 폐수 처리시설 지원
 - 낙농 경영진단 사업
 - 낙농단지, 낙농밀집 지역의 폐수 공동처리 시설
 - 분뇨의 비료화 시설
 - 개별 낙농가의 폐수처리
 - 집유장의 폐수 처리 시설
- 낙농단지 입주 낙농가의 양축자금, 축사시설비, 낙농기자재 구입비 용자
- 낙농 폐수처리 시설 자금 용자
- 생력화 시설 및 기계 구입 자금의 용자
 - 착유기(파이프 라인, 밀킹 팔라), 냉각기, 트랙터, 크로어, 분뇨 살포기, 반크리너, 스크래퍼, 자동보온급수기
 - 사일로 건축비(연중 사일리지)
 - 생력화를 위한 우사시설 개수 자금
- 산지내 우사 신축시 대체조립비 면제
 - 면제 규모 확대 (현재) 1,500㎡ → (조정) 3,000㎡

<p>3. 낙농안정화 계획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소득 안정 ○ 비축, 완충 재고 계획 ○ 시장 유통량 규제 ○ 국가무역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소득 평준화 ○ 소비자 보호, 유통효율개선 ○ 유통 질서 확립, 생산 의욕 고취 ○ 차별적 가격 형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낙농 생산비 분담 ○ 재고 유제품에 대한 이자, 보관료지불 ○ 농산물 유통 신용 공사 설립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재고 매입, 방출 등 수급조절 ○ 생산 할당제 (계획 생산) ○ 감산 계획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도태 - 모유 급여 ○ 수급 조절용 유제품 구입, 공급
<p>4. 간접 소득지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가격, 부족 지불제도 ○ 생산 보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낙농소득 지지 ○ 낙농소득 증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가공 원료유에 대한 부족 지불제 ○ 송아지 안정 기금 ○ 쇠고기 가격 안정대 신축 운용 ○ 관개 및 화학비료 보조금 지원
<p>5. 간접 무역대책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경 조치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내 가격 및 소득보호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유제품 및 유사 유제품에 대한 HS 재분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분류체계 재조정 - 용도 및 유가공품 함량에 따른 합리적 조정 - 부적합 수입 요령 및 관세율 조정 ○ 산업 피해 구제 신청, 긴급 수입제한 ○ 농산물 무역 위원회 설치 운용 ○ 개방우선 순위에 따른 개방

5. 결론

우리나라 경제의 실질적 성장과 대외적 성장 및 국제 사회에서의 역할 증대는 그 반대 급부로 우리나라 농업의 국제화를 강요하고 있다.

그것은 하나의 큰 물결이며 막을 수도 없다. 그러나 우리나라의 농업 대부분이 그렇지만 그 중 낙농업은 낙농선진국의 그것에 비하여 엄청난 차이로 제도적, 기술적, 경영환경적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여 우리나라 낙농이 국제화되기 위하여는 대내적으로 선결되어야 할 과제들이 너무나 많음을 간과 할 수 없다.

한편 낙농은 어느나라든 자급형 산업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으며 자유경제시장에 방치 해 둘 수 없는 우유의 특성으로 모든 국가가 유제품에 대한 무역개방을 하지 않고 있다. 이점은 앞으로 우리 정부가 통상 정책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것이나 낙농

가들도 무역보호에만 안주 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요구, 농업구조의 개편, 사회적 변화 등으로 자구적 노력은 필연적 일 수 밖에 없다. 그러나 우리나라 낙농이 국제화되기 위하여는 상당한 정부의 지원이 없이는 불가능하며 그러한 지원도 낙농의 특성상 장기화 할 수 밖에 없다.

이와 같이 우리나라 낙농이 향후 안정적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낙농가 스스로의 노력과 정부지원 등의 역할분담이 적절히 수행되어야 조화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본다.

한편, 우리나라 낙농이 안고 있는 현안문제점들을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해결할 실마리를 줄 수 있는 낙농진흥법의 개정을 조속히 실천하여 집유 일원화, 원유검사제도의 개선, 가격제도의 개선과 유질의 선진화, 수입개방 대응의 법적 장치 마련, 수급안정, 낙농전달 조정기구의 설치등이 실현 되도록 우선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.